



보도자료

작성 국토환경·자원연구본부 안예현 부연구위원(044-960-0546)

배포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 행정원(044-960-0582)
홍보출판팀 이호창 팀장(044-960-0428)

보도일시 ■ 즉시 보도 가능

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

국토研, 국토정책Brief 제910호

-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별로 취약계층·산업·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간적·통합적 접근이 미흡하였다.
 - 탄소중립 전환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나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 간 역량 및 경험에 격차가 크고,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와 지역정책적 접근 부족
- 국토연구원(원장 강현수) 국토환경·자원연구본부 안예현 부연구위원은 국토정책 Brief 제910호 “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” 에서 지역 내 탄소배출, 지역의 감축 부담 및 영향,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지역의 탄소중립 전환 취약성을 분석하고, 고위험·저역량 취약지역을 확인했다.
 - 에너지, 산업, 건물, 수송 등 4개 부문의 지역배출, 영향 및 부담 항목의 취약성 분석결과를 중첩하여, 다부문 고위험 취약지역을 도출하고
 - 지역대응력을 고려하여 다부문 고위험·저역량 취약지역으로 4개 부문 취약지역 2개, 3개 부문 취약지역 9개, 2개 부문 취약지역 35개 지역을 도출하였다.

표 2 다부문 고위험·저역량지역

구분	지역	개소
4개 부문	강릉, 삼척	2
3개 부문	광주 북, 평창, 인제, 제천, 보은, 옥천, 단양, 공주, 군위	9
2개 부문	부산 금정, 대구 동, 대구 북, 인천 동, 인천 옹진, 대전 동, 홍천, 횡성, 고성, 양양, 괴산, 증평, 금산, 부여, 서천, 예산, 익산, 김제, 임실, 담양, 곡성, 고흥, 보성, 장흥, 해남, 함평, 장성, 영주, 영천, 상주, 성주, 밀양, 창녕, 하동, 함양	35

- 사례분석 결과로 지역주민,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별로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각이 다르며, 지역의 관련 정책·사업 경험에 따라 주민 수용성과 정책 효과가 상이하다고 설명하며 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.

- 국가 탄소중립 추진전략 내 기후정의 주류정책화
- 증거기반의 과학적 취약지역 지원체계 구축
- 섹터커플링을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
- 장소기반 접근을 통한 지역역량 및 수용성 제고

첨부. 국토정책brief 910호(탄소중립 전환 취약지역 지원방안)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	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연구원 홍보출판팀 김지형 3급행정원(☎044-960-05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